

※칼럼 내용은 본 신문의 論調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Future of Utility

⑧ 백년대계

대입전형 개편을 두고 무척 시끄럽다. 요즘 대입전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무엇이 어떻다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너무 복잡하고 정책이 자주 바뀐다고 느낀다. 교육정책이 자주 오락가락하면서 힘들고 서글퍼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쩔모리서 부끄럽고 미안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1년을 떠나보며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고는 나무를 심고,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어디 교육뿐이라. 결국 백년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은 지금 또는 미래의 아이들이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환경도 에너지도 모두 그 미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에너지 역시 백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백년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20년 동안 국가 에너지 공급방향을 정하기 위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지난 3월 시작되었다. 에기본은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에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에기본은 장기 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비전을 수립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을 가장 먼저 논의한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석유파동,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보면서 에너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에 나섰다. 2005년 목표가 202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이었는데 2015년에 이미 32%에 도달했고 2030년 목표를 60%로 늘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보이는 독일의 에너지전환도 초기에는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합의가 반복되었고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국민의 비판, 전력설비 설치에 반대하는 남비 현상도 역시 있었다. 에너지전환의 한계점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높아진 전기요금 문제가 대표적이고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산업 전반에 확산되지 못한 점도 속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한 문제를 해결해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이 화두가 되면서 독일의 성공요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분주하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성공 스토리만 보이고 이제 완성된 정책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에너지전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백년의 계획이라고 치고 보면 독일 역시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고 있다. 우리의 교육정책이나 에너지정책도 백년대계답게 일관성 있고 사회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정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문제점도 예상하고 인정하면서, 때로는 성숙한 태도로 지켜봐 주면서 두터운 '공감대'를 만들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윤경
한진 경제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촌광장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 한미 FTA 재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대외적인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는 데에 반해 국내경제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일자리 문제 해결이었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지난 3월 11.6%로 2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제조업 생산 감소에 따라 상용일자리가 3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이 부정적 평가의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기존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거나 고용률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고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유사한 형태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 한다.

그런데, 정부의 그러한 노동정책들은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은 이미 그만큼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되어버린 노동정책들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만 충분히 높다면 급격한 정규직을 고용하고자 할 수 있다. 반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새로운 비용절감 노력을 강요한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상승을 극복할 능력을 갖춰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저비용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쉬운 방안을 선택하려 한다. 즉, 최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낮아진 고용률을 감안한다면 노동자 전체의 실질소득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시간단축은 어떠한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줄어드는 생산을 보전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동결시켜 비용을 절감하거나 고용친화적이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20대 청년의 고용기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률 저하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인 실질소득 증가조차 실현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노동정책이 아닌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 정책 집행 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다.

한국 경제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감소하고 있고,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정부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노동정책이 오히려 그

부작용을 악화시킨다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노동정책들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또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즉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려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이나 중소기업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은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장기화된 정부 지원은 보조금만 노린 악용 사례와 세수낭비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

그렇다면 단기적 대책은 부재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스스로 작동할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일례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는 스미스의 시장 실험에 따르면 시장의 거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때,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을 갖춘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고용될 수 있다. 그러한 합리적 고용이 당장 완전고용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나마 합리적으로 단기적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비밀스레기 대책으로 공공기관 페트병 생수 휴대제한, 비밀봉지 제공 금지를 발표한 정부의 정책역량이 믿음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그러한 노력이 조금이나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소망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DIGITAL 경제산책

“대한민국은 한 번도 살 만한 나라인 적이 없다.”
얼마 전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20대 청년이 청년들의 고용을 토로하며 날린 ‘2018년의 한국이 살 만한 나라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답이다.

그는 “지금도 실업률이 높지만 가장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는 1999년 IMF 때였다”며 “그 시절 20대는 지금 40대가 됐다”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힘들지 않았던 세대는 없고 다만 힘든 방식이 달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모든 세대가 저마다 주어진 현실이 무겁지만, 오늘날의 수치는 가혹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체 실업률(4.5%)의 2배가 넘는다.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24%에 달한다. 청년층(15~29세)의 4명 중 1명은 사실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 공포’는 20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전방위적으로 고용악화가 확산되고 있다. 올 1분기 50대 실업자는 16만1000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살 만한 나라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만5000명 감소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감소율(1.3%)을 보였다. 40·50대의 고용사정에도 비상이 켜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

와대입이다’에 나와 사자성이 ‘근화원수’(近火遠水)를 언급하며,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단기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화원수는 불이 났지만 물이 멀리 있는 상황에 대한 비유다.

그는 ‘궁극적으로 멀리 있는 물을 가져와 불을 끄는’ 구조적 접근과 함께 ‘근처 작은 웅덩이, 모래라도 끌어와 불을 끄는’ 단기대책을 제시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추경, 세제개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을 꼽았다.

단기대책 중 하나인 ‘일자리 추경안’은 지난 달 국회에 제출됐지만, 딱 막힌 정국 탓에 국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임버릇처럼 말하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보면 ‘살 만한 나라’는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물에 불과해 보인다.

조재학 기자 2h@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7150118	
사장 · 발행인 이형주	편집인 이홍우	편집국장 유희덕	인쇄사 문화일보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7길 8 (동촌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 장 실 (02)2168-1301~2 부 사 장 실 (02)2168-1303~4 편 집 팀 (02)2168-1312~5 에너지 Biz팀 (02)2168-1320~4 산 업 팀 (02)2168-1330~4 디지털뉴스팀 (02)2168-1340~2 FAX 2168-1349	광고마케팅팀 (02)2168-1351~7 FAX 2168-1349 경영지원팀 (02)2168-1306~8 FAX 2168-1349 사 업 팀 (02)2168-1360~1 FAX 2168-1349	광고문의 (02)2168-1351~7 FAX 2168-1349 구독문의 (02)2168-1306~8 FAX 2168-1349	본사 외규제역사 중국전역(보)중국, 베트남전(리뷰)베트남전 기자(필)미국, 홍콩 E&EN 저널
매주 월·수·금요일 발행 구독료 월 15,000원 연 18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EC

전설 자재 전문 기업 (주)만희기전

wieland 방수용 원형 커넥터

RST 시리즈 2,3,4,5-pole, 250/400V, 8,16,25,32,50A



작업성이 용이 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케이블 커팅, 스트리핑 처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WAGO 꽃음형 전선 커넥터

배선시간은 80% 비용은 50%



- 연선 0.14 - 4 mm²
- 단선 0.2 - 4 mm²
- 450 V/4 kV/32A

JOKARI ORIGINAL 전선탄피공구



DEHN 서지보호기, 피뢰, 접지, 전기안전용품



Safety Equipment

Life Check test

전원 용, Class I, II, III



(주)만희기전 경기도 과천시 궁말로 20 (과천동) TEL:02-2194-3300 FAX: 02-2194-3398 E-Mail : admin@mec.co.kr